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들의 노사관계

-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4월 2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공동워크숍의 발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일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동기는 시장접근성, 고객수요 변화에 대응 용이성으로 다른 아시아국가에 투자한 동기인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는 차이가 있음
 - 일본투자기업의 60% 정도에서 노사관계, 80% 정도가 한국의 인건비 급등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음
 - 일본 투자기업에서의 투쟁적 노조, 일본경영진과 한국인 근로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노사관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 투자기업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일본식 생산방식의 한국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성공적 기업은 한국의 기존 제도와 관행이라는 장벽 앞에 한국인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일본식 생산방식의 이전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으며 노조의 협력이 중요했음

□ 한국노동연구원과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4월 27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진출 일본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갖고 3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사카이 스미오씨는

- 일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동기가 시장접근성, 고객수요 변화에 대응 용이성에 있어 다른 아시아국가에 투자한 동기인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는 다름
- 한국 진출 일본기업의 60% 정도에서 노사관계가, 80% 정도에서는 한국에서 인건비 급등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은 임금이었으며, 특히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였는데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아시아 다른 나라의 임금상승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었음

- 또 다른 쟁점은 노조의 인정, 조합원 차별 등이었는데 이는 일본인 경영진과 한국의 노조 사이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
- 일본인 경영진은 한국노조가 너무 투쟁적이고 노동법제가 노동자측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나 노사간의 신뢰구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일반 노동자들과 일본인 경영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한국인 중간관리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이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을 낳은 요인이 됨

○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연구위원은

-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노사관계, 인사관행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노사분규를 경험해 왔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日本계 투자企業에서 1987년 이후 일어나 전체 노사분규는 약 50여건이었다. 자동차 部品제조업이 15건, 전자제품 및 전자部品 9건, 화학 3건 기타 23건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일어났다. 파업사유로는 賃金 및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가장 많았고(31건),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관련(8건), 노조활동 보장(4건), 해고자 복직(2건) 노사간의 감정악화의 장기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있었다. 파업의 약 1/2이 한달 이내에 끝난 반면, 30% 이상은 파업이 한달 이상을 끈 것을 알 수 있다.
- 일본투자기업들 중에서도 경영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와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
- 일본투자기업들이 일본식의 노사관계나 인사제도를 쉽게 이식하려는 시도는 크고 작은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관계 관리는 일본인 경영진이나 파견된 일본인 관리자들로 통하기보다 한국인 경영진이나 관리자들로 통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으며 일본인 경영진이나 관리자들도 언어문제, 일본식 경영과 관리방식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한국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작업현장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혁신, 지속적인 개선, 높은 품질의 제품생산은 가능하며 A전자는 일본 본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50여개 해외공장 가운데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공장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식의 Lean생산방식의 핵심적 원리들이 도입되어 정착되어 있음
- 다만 A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투자와 접근을 필요로 하며,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개편했을 때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